



독일의 입장 선회로 유럽 재정위기 해결 기대감 형성

이정환 선임연구원

■ 유럽 재정위기 해결 방안으로 재정긴축만을 고수해 왔던 독일이 기존의 강경 입장을 선회할 기미를 보임에 따라 위기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됨.

- 독일은 재정위기 국가의 재정긴축 이행 약속을 주장하여 왔으나, 유로존의 붕괴가 가시화되면서 독일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어짐.
 - G20은 유럽 재정위기 해결 방안으로 정책 공조¹⁾를 통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유로존의 은행동맹 (banking union)을 제시함.²⁾
 - 미국, 러시아 등 비(非) 유로존 국가들은 G20회의에서 독일이 위기 해결의 선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 독일은 은행동맹 결성을 지지하는 G20 성명 발표에 반대하지 않음.
 - 전문가들은 이를 은행동맹 구성에 대해 독일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해석함.
 - 반면, 독일이 은행동맹 구성에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엔 이르다는 해석도 있음.³⁾

■ 독일은 유럽연합(EU)이 유럽 내 구제금융 기구를 통해 재정위기국의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⁴⁾에 반대하지 않기로 함.

- 독일은 EFSF 또는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 등 유로존 기금을 재정위기 국가들의 국채 매입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더 이상 반대⁵⁾하지 않기로 합의함.

1) 다만, 어떤 국가는 성장을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으로 해석한 반면, 독일 등은 경제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해석함에 따라 2008년과 같은 경기부양 정책 공조는 나타나기 힘들어 보임.

2) G20은 유럽 내 은행 감독, 자본 구성, 예금보험을 포함하는 통합된 은행동맹을 지향하는 구체적 조치를 요구함.

3)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너지itung은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 은행동맹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독일이 원하는 건 예금보험제도를 어느 정도 통일하자는 수준이라고 언급함.

4) 현재 EFSF와 7월 출범할 ESM의 규모는 총 7,500억 유로임.

5) 독일은 EFSF의 27%를 부담하는 최대 출자국인데, EFSF가 재정 위기국 국채를 매입할 경우 결국 독일이 손실을 부담하여야 될 것이라는 이유로 국채 매입에 반대함.

■ 또한 독일을 포함한 유로존 재무장관그룹,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위원회(EC)는 유로본드 도입 등에 대한 논의를 재개함.

● 블룸버그는 이들 3개 기구가 비록 단기이기는 하지만 유로본드 도입 논의를 재개하였으며, 그 외에도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채무상환기금 형성, 공동 은행감독기구 설립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고 보도함.

- 단기 유로본드는 유로존 공통 익스포저로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채무상환기금은 국채 금리를 낮추고 재정위기 국가들의 채무 비중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될 예정임.

● 단기 유로본드 도입에 대한 논의 결과는 6월 말 개최되는 EU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임.

■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의 국채 금리는 은행동맹과 국채 매입에 대한 독일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로 이들 연속 하락함.

●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6월 18일 7.15%까지 상승한 이후 이들 연속 하락하여 6월 20일 6.744%를 기록하였고,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 금리 역시 이들 연속 하락, 6월 20일 5.767%를 기록함.

● ING는 ESM이 재정위기국의 국채를 매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단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Wall Street Journal 등, 6/20)